

# 광주·전남 현안 적극 챙겨 지역 표심 이탈 막기

## 민주 '상생발전TF' 배경·전망

집권 염두 지방친화 이미지 제고 '민·군공항' 둘러싼 지역 분열 제어 "당내 지방 살리기 논의 큰 공감" 市·道, TF 구성 환영 적극 참여 뜻

차기 집권을 노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광주와 전남에 대한 지원 강화에 나섰다.

광주 민·군공항 이전 등 답보상태에 놓인 지역 현안을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풀어가겠다는 것으로, 이는 지방 친화 이미지를 통해 지역 표심의 이탈을 막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은 26일 광주시청에서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의 집권 플랜의 핵심은 지방 부활"이라고 강조하면서 "가칭 광주·전남 상생발전 TF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이 꺼내 든 광주·전남 상생발전 TF는 광주와 전남의 핵심 어젠다를 민주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풀어나가는 기구로 운영될 전망이다.

TF 시발점은 지난 9월 강기정 시장이 공항 관련 3개 단체장의 소속 정당인 민주당에 '특위' 구성을 요청하면서다. 즉, 광주에서 공항 통합 이전에 대한 요구를 강하게 하자, 민주당에서는 전반적인 지역 현안을 풀어나가는 형태로 문제를 해결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6일 광주시청 기자실에서 '광주·전남 상생발전TF' 구성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는 공항 통합 이전을 두고 자칫 광주와 전남이 분열할 수 있는 불씨를 지역 현안 해결이라는 큰 테두리로 확장시켜 제어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그래서인지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지방 부활의 중심에는 광주와 전남, 호남이 있다"면서 "민주당이 지난 영광·곡성 보궐선거를 통해 질책을 받았는데, 그 후로 지방 살리기에 대한 논의가 당 내부에서 큰 공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 지역정가에서는 "지난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혼이 많이 난 것은 사실이다. 지역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는 질책도 받았다"면서 "표발이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감과 오랜 지역 난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는데 대한 지역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적극 나서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밖에 광주·전남 상생발전 TF가 민주당 내부의 공감을 얻는 데는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의 역할도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 위원장은 지난 9월 광주·전남에서 '민군공항 이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당사자 양측의 목소리를 들었고,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광주·전남도의 역할을 강조하며 논의의 물꼬를 텄다. 이를 토대로 양 위원장이 김 최고위원에게 중앙당 차원의 TF를 제안했다.

양 위원장은 "이제는 지자체에서 해결해야 할 단계는 지났다. 정부와 여야가 합심해 현안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국방위원들과도 긴밀히 만나고 있다. (시도간) 갈등을 매듭짓고 사태 해결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TF 발족 후 첫 과제로 '무안 주민투표'를 꼽았다.

양 위원장은 "이제 광주시 차원의 여론조사·토론회 등은 하지 않는다. 중앙당에서 주민 홍보·지원책 등을 강구할 예정"이

라며 "무안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효율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대구·경북 사례가 있는 만큼, 객관적인 관점에서 주민투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일단 민주당의 상생 TF를 반기는 분위기다.

강 시장은 "최대 현안인 공항 통합 이전이 전국 현안으로 바뀌었고 행정이 제시한 방향에 정치의 힘이 더해진 만큼 정부와 중앙당이 넓은 관점에서 풍성한 논의 과정을 거쳐 방향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도 역시 대변인 명의로 입장문을 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남도는 "(광주시의) 열린대화방 운영, 공항도시 무안 미래비전 토론회, 여론조사를 중지하고, 12월 데드라인을 철저히 한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군공항 이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범정부협의체와 민주당 광주·전남 상생발전 TF에도 참여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남도는 이어 "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안군민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광주시가 무안군민을 설득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안과 함께 '무안군 미래발전 비전'을 제시하며 진정성 있게 접근한다면, 전남도는 앞으로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노병하·오지현·정성현 기자**



강기정 광주시장의 26일 시청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들과 차담회를 갖고 민·군공항 통합이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 "민·군공항 이전 '범정부협의체 실무회의' 개최 환영"

본보, 범정부협의체 필요성 제기 관계부처·지자체 논의 자리 마련

전남일보가 지난 11일 보도한 <군공항 이전, 광주·무안 모두 도움되는 선택해야> 제하의 기사에서 범정부협의체 운영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 정부가 공항이전 문제를 다룰 실무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광주시와 지역의원들은 "민·군공항 이전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고 환영했다.

강기정 시장은 26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민·군공항 이전이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로 확대되고 지역의 현안에서 전국의 현안으로 바뀌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21일 세종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건의한 '범정부협의체 운영 재개 건의'가 오는 12월 국무1차장 주제로 열리는 실무회의 개최(광주시·전남도·무안군·국방부·국토부·행안부참여)로 화답했다고 밝혔다.

민·군공항 통합이전을 위해 꾸려진 국무조정실 주관 '광주 군공항 이전 범정부 협의체'는 지난 2021년 5월 이후 중단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지역 의원들은 본보 인터뷰를 통해 범정부협의체 재개를 촉구하기도 했다.

전진숙(복구) 의원은 "군공항 이전은 정부와 국회, 정당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민·군공항 통합 이전으로 인한 이익은 지역이 아닌 국가 차원의 기회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욱(동남) 의원은 "전남쪽 주장과 같이 실제 광주시 재정 형편이 좋지 못한 건 사실이다. 대규모 자원이 들어가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며 "광주·대구·수원 3개 지역에서 군

공항 통합을 진행하고 있다.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협의체를 통해) 일괄적 해결할 수 있다. 정부가 대안을 내놓으면 국회는 여야 힘을 모아 입법으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강 시장의 발표로 인해 민·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키를 쥐고 있던 광주시와 전남도의 물밑 접촉 등 논의는 잠시 수면 아래로 잠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추진중인 실무회의가 실제 범정부협의체 재개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은 "(현안) 해법을 찾기 위해 국무조정실 '범정부협의체'와 꼭 함께하겠다"고 의지를 표했다.

**정성현 기자**

**JIN AIR**  
문의/예약 : 1522-1901

무안-도쿄 진에어(JIN) 정기편 취항 확정!  
도쿄온천여행 2박 3일  
1인기준 699,000~

\* 해당 상품은 출발일마다 요금이 상이합니다. ▶ 포함내역 : 항공 및 유류세TAX, 호텔(2인1실), 차량, 가이드, 일정상의 식사 및 관광지 입장료, 2억원 여행자보험 ▶ 쇼핑 : 1회 (면세점)  
▶ 불포함 내역 : 기사 & 가이드팀(1인 ¥3,000), 매니팅, 싱글차지(2박/15만원), 국내수송, 기타개인경비, 여권 (여권의 유효기간은 출발일 기준 6개월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 종합여행업 기획여행신고(2억원) 100-000-2024 0474 4822 호 ▷ 관광사업자 등록 제2008-000001호 ▷ 사업자등록 410-81-73451 (주) 조이투어 ▷ 당사는 관광진흥법,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를 철저히 준수합니다.